

# 민심을 배반한 국회를 넘어 민중의 촛불로 끝내자

## 박근혜 3차 담화, 로맨틱, 성공적?

“박근혜를 언제, 어떻게 버려야 서로에게 이득인가?” 요즘 조선일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검찰 등 보수기득권세력에게 박근혜는 이미 죽은 권력이다. 새누리당의 친박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제 보수 세력은 물론 모든 정치인이 죽은 박근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박근혜 3차 담화를 박근혜의 퇴진 의사 표명으로 이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3차 담화는 “너희가 미래 권력의 구도를 그려보라”는 내밀한 유혹이었고, 보수대연합은 여기에 화답해 <4월 퇴진, 6월 대선, 재집권을 위한 권력 재편성>이라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당장 새누리당 비박계열과 국민의당은 이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벌써 집권이라도 한 양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탄핵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었다. 또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새누리당, 특히 친박세력에게 숨통을 터주었다. 정치적 계산에 골몰한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사이에 내분을 일으켰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4월 퇴진-6월대선”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하고 보수세력을 규합하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박근혜도 덩달아 어떠한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며 완강한 버티기에 들어갔다. 박근혜는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최성규(세월호 막말 목사)를 임명했고, 경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했다. 그 궤를 같이하면서 박근혜의 대구방문이 이어졌다. 박근혜 3차 담화는 국민에게는 분노를 안겼지만,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셈이다.

## 민심을 배신한 국회, 해답은 거리에

박근혜 3차 담화에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탄핵 발의보다 가결이 중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새누리당 쪽으로 두발짝 더 다가섰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잇속을 계산하며 탄핵을 늦추려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일 **국민의당전북도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국민의당이 허둥지둥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돌아오는 주에도 청와대-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며 갈짓자 행보를 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각 세력들이 오판하고 있는 게 있다. 현 국면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회에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당, 더민주당 모두 100만 촛불이 타오르기 전까지는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었다. 이제와 마치 자신들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 탄핵에 나서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민심의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요구에 등떠밀려, 퇴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서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체제는, 대체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하여 권력을 전횡하는 가짜 대의민주주의로 작동한다. 하지만 거리로 민중들이 쏟아져 나오는 특수한 기간에는 권력이 거리로 이동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우리 스스로 이 역동성을 신뢰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바로 우리에게! 거리의 민중들에게 있다.**

## '박근혜 퇴진'에 담긴 의미

되짚어보면, 우리는 ‘탄핵’을 외친 적이 없었다. 거리에 모인 민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박근혜 정권의 조건없는 즉각 퇴진’이었다. 이 요구가 국회에서는 ‘탄핵’으로 적용된 것 뿐이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법이 등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와 동떨어진 변질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정치세력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퇴진’에 담긴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친 ‘박근혜 퇴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검찰 등 그 부역세력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퇴진**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범죄자 박근혜 일당을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박근혜 일당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 요구들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4월 퇴진’이니 개헌이니 하는 헛소리를 뱉는 세력은 박근혜 일당과 함께 청산당할 대상이 될 것이다. 아직 갈길이 멀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전북의 노동자 시민이 12월 1일 국민의당전북도당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을 시작한지 2시간 만에 국민의당은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중의 힘이다.





# 부회장님, 우리 연금은 어떻게 된겁니까?



## 박근혜 게이트 공범, 삼성을 처벌하라

### 삼성은 이득보고 국민들은 손해봤다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다. 삼성물산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합병의 성공에는,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통해 자신의 숙원을 이뤘다.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는,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 경영세습에 중요한 고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합병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손해를 입었다. 그것도 무려 4천9백억원이나. 국민연금기금은 어떤 돈인가? 바로 국민들이 낸 돈이다. 손해가 뻔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이 결정에 정권이 개입했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는 의결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합병 찬성을 요구했고, 기금운용본부장이던 홍완

선은 위원회 교체, 위원 교체 등 이례적 꼼수로 합병찬성을 이끌었다. 홍완선은 찬성가결을 며칠 앞두고 이재용을 따로 만났음을 국정조사에서 실토했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합병안이 이대로 가결되면, 국민연금이 최소 3천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구체적 정보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

###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은 한 몸이다

최근 온 국민이 알게 된 미르재단, K스포츠 등에 삼성은 204억을 출연했다. 최순실의 조카장시호의 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을 투자했다. 이재용은 합병 이전 박근혜와 만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민원성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합병이 이뤄진 바로 당일, 삼성은 최순실의 비텍스포츠에 35억을 송금했다. 또 추가적으로 186억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펀돈(?)들로 비선실세와 국가권력을 움직였으니 정말 창조적인 경영이다.

삼성의 이재용은 최순실에게 투자하고 최순실은 박근혜의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움직여 삼성의 뒤를 봐줬다. 그들은 모두 이득을 봤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인가. 오로지 매달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가며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이다.

### 〈이재용 특별법〉을 제정하자!

삼성의 반헌법 반윤리적 작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순실의 독일인 동업자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노동조합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반노조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에서 발생한 수 십명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거부중이다. 이를 감시해야 할 노동부는 사람이 죽어도 특별근로감독 한 번 나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집단이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에 가능했다. 재벌과 권력은 한 몸이다. 삼성을 질타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끝까지 징벌한다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 삼성이 국민연금기금에 입힌 피해는 당연히 복구되어야 한다.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이 한국정부에 수조 원대 국제제소(ISD)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국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일명 이재용특별법이다.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반드시 관철해야 할 내용이다.

삼성을 바로잡아야 정치 권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삼성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

